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경철** · 한승석^b

^a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b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Guarantee for Rural Residents

Kyong-Cheol Park^a · Seung-Seok Han^b

^a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Social Integration, Chungnam Institute, Gongju, Chungnam, South Korea

^bResearcher, Department of Urban-Rural & Culture Research, Chungnam Institute, Gongju, Chungnam, South Korea

Abstract

Under the premise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s study raised criticism tha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promoted in earnest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adversely deepened the developme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urban. In the meantime, the agricultural economy that supported the rural economy has gradually collapsed after reckless market opening, and due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ural areas are facing a crisis of 'depopulation' and 'regional extinction.' For this reason, many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recognized the public values of agriculture and have introduced 'agrarian basic income' for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overcoming the crisis in rural areas because the population of farmers among rural residents is only 25%.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for rural residents as a new paradigm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yond the existing policy limits, based on surveys of opinions of residents living i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and expert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for rural residents' in the future.

Key word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sic income, agrarian basic income, rural residents

1. 서론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 방식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지방 간,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전도 함께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도농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중심이 되면서 지방으로부터 자본과 자원, 그리고 인력

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발전과 성장만을 지상 목표로 삼은 군사 정부의 완고한 경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무모한 정책을 추동하는 서울 중심의 기득권 유지 내지 확대 생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 추동은 한계에 부딪혔다. 성경룡(2005)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요소투입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압축된 산업

주요어: 국가균형발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농촌주민

*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9년 전략과제(19JU010)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내용이며 2020년 12월 18일 한국사회학대회 <농촌분과>에서 초고를 발표한 바 있다.

** 교신저자(박경철) 전화: 041-840-1206, e-mail: kcpark@cni.re.kr

회를 통해 일인당 1만불을 달성하며 중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침체, 국민 분열 및 지역갈등,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였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를 전국에 건설해 국토의 고른 발전을 추진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소수의 특정 지역만을 집중해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지역에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를 국가 전역에 확산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동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주로 도시건설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위주였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와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본이 다시 도시건설을 위해 투자되었다. 이들 도시 건설을 위해 수많은 농경지 등이 잠식되고 농촌주민들은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세종특별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도시지역에의 집중 투자는 농촌의 자원과 인구가 이들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해 농촌의 공동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하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첨단산업단지, 새만금간척지 등의 신성장거점 구축과 농촌과 도시 간 격차완화 이슈를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추가하였다.(양광식, 2018: 39) 하지만 현재까지 농촌과 도시 간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은 미약한 상태이다. 최근의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각종 농촌개발사업은 기존 사업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 농촌개발관련 예산의 지방정부 이양도 아직까지 뚜렷한 비전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일선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정책과 농정이 농업·농촌의 문제와 도농 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수단으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 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두 제도 간 가장 큰 차이는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개별성을 중시해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농민수당제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농민개별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두 제도 간 차이는 크게 없다고 판단된다.

아무튼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농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증진하고, ‘지역소멸’시대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해남군, 고창군, 부여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농민수당제가 도입된 이후 점차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2020년부터는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에서 실행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충북도, 경기도(농민기본소득), 강원도에서 실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경북도, 제주도에서도 2022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촌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은 액수가 농가당 연간 60~80만 원¹⁾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비농민에게는 혜택이 없다. 대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기존 농정에서도 배제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거점 도시 발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세부적으로는 도농 간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넘어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 제도 도입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 조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1) 경기도는 2021년 하반기부터 도내 6개 시군에서 농가당이 아닌 농민 개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와 한계

낙후지역 발전, 내발적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담론은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국가적 어젠다로 등장한 것은 2002년 참여정부 출범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철모(2005)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정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지난 30년간 추진되어온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별 지역혁신정책을 지방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내발적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호영(2006)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불균형발전 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패요인과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종용(2008)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평가와 과제” 연구에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활발히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과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김현호(2007) 또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혁신에 기반을 두어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건설’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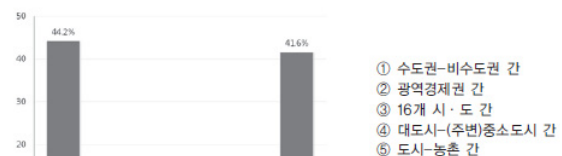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은경(2007)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에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없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한 무분별한 도시개발정책에 불과하고, 2단계 종합대책은 국가균형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내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킴을 지적하고 향후 ‘국가균형발전’ 개념 폐기, 지역 격차 완화 목표 도입,

낙후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배준구(2008)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향후 과제로 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현재까지 하드웨어적,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설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궁극적 서비스의 수혜단위인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과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한 개념이 간과되어 있고, 각 지역을 고립적 경쟁단위로 인식한 나머지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통합적 시너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초의수(2008) 역시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지역격차 문제 인식, 즉,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인식과 관련해서 연령, 교육 정도, 계층, 소득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지역 고연령자나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서 지역 격차에 대한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모성운(2009)은 참여정부의 제1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로는 지역혁신의 개념을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점, 지역 대학을 지역혁신의 동인으로 파악한 점, 낙후지역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준홍(2013)은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는 OECD 국가 가운데 4위라는 점을 밝히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는 시도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림 1>과 같이 이들 격차 중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것은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이에 못지않게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100% 국민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



자료: 전국시도연구협의회, 2012,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임준홍(2013), 재참조.

<그림 1> 지역격차 심화 유형

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차재권(2017)은 박정희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역대정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다양한 추진과정과 성과들을 비교분석하고 지역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김정연(2017)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화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향과 과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실천 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양광식(2018)은 삶의 질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분석단위가 16개 광역 시도이기 때문에 도농 간 불균형 발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광식(2018: 39)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경쟁력, 친환경을 중요한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 지역단위에서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 환경질의 균형적 발전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지표는 <표 1>과 같다). 특히, 우수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지역일지라도 사회적 형평성은 취약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환경질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산업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될수록 지역 내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의 질은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제로는 국가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2)

<표 1>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연구의 분석지표

분석항목	분석지표	측정방법	비고
경제성장	지역총생산	지역총생산액/인구수	당해 연도 가격 기준
	지방세	지방세 징수액/인구수	
사회적 형평성	절대빈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기준
	아동빈곤	아동빈곤인구/20세 미만 인구수	소년소녀 가정수,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수, 요보호 아동수
	노인빈곤	노인빈곤인구/65세 이상 인구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거주자 수
환경질	대기오염	대기오염원의 평균값	야행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소음	일반지역의 소음도 평균값	낮과 밤의 소음도 평균값
	쾌적성	공원면적/인구수	

자료: 양광식(2018),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연구, p.34.

2.2.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논의 동향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강남훈, 2019; 다니엘 리벤토스, 2016; 필리프 판 파레이스, & 아니크 판데르보흐트, 2018; Standing, 2013)3).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연계된 임금체계를 극복해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체제로 기존의 완전고용을 가정한 선별복지체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가이 스탠딩, 2017; 광노안, 2004; 최광은, 2010; Casassas, 2007, 2016)

기본소득제에는 크게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등 3가지 특성4)을 지닌다(강남훈, 2014). 여기서 보편성은 부자에게도 준다, 개별성은 개인별로 준다, 무조건성은 노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인구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인이나 아동 등 일부의 인구 집단에 대해서 지급되는 소득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특정연령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했던 성남시의 청년배당,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아동수당, 노인기초노령연금도 기본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같이 일정한 사회·

2)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또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해 추진(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8)되고 있지만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3) 기본소득에 대해 학자마다 정의(definition)가 다소 다르지만 공통된 특성은 이와 같다. 여기에 정기성과 현금성을 더해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으로 규정된다. 즉, 기본소득은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어야 하고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에서 정기성과 현금성이 포함되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으로 불린다(가이 스탠딩, 2017; 강남훈, 2019)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 조건으로 주는 참여소득 또한 큰 범위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1797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토지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에서 말한 ‘시민배당’,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사회적 배당’, 그리고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평생 사회수당’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King, & John Marangos, 2006; Meade, 1991; 박경철, 2015) 그동안 국외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었거나 실험된 바 있다.(Forget, 2011; Kangas et al., 2019; Osterkamp, 2013; Standing, 2013; van Parijs, 2020)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강남훈, 2014; 강남훈, 2019; 강남훈, & 곽노완 외, 2014; 곽노완, 2004; 김교성, 2009; 오준호, 2017; 이명현, & 강대선, 2011; 이원재 외, 2019)

이러한 기본소득의 개념을 토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을 농촌지역에서 먼저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박경철, 2013·2015; 김성훈, 2015; 정기석, 2014·2018)⁵⁾ 현재와 같이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는 농촌에서부터 먼저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정기석(2014, 2018)은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은 현재 농업소득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개방농정과 살농(殺農)정책으로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식량주권의 위기와 농민의 생존권 위협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을 전환을 통한 근원적 처방이 절실히 현재 달리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도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박경철(2014, 2015, 2016)은 근래 들어 한·미FTA, 한·중FTA 등 농산물 수출대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체결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나마 낙후지역 농어촌주민을 중심으로 한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모델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제도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대다수 농어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농촌 내 비농업인 가운데 많은 복지사각계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박경철(2015)은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농업과 농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농촌주민, 특히 농정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실험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충남도내 농촌마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농민기본소득을 농민단위, 농가단위, 농촌주민 단위 지급의 경우 발생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금산군 소재 B마을을 대상으로 각 기본소득 실시 유형별 차이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유형별 차이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즉 농민수당의 지급 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하승수(2015)도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를 푸는 데에는 대도시로부터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윤정미 외(2017)는 과소고령화로 인한 한계마을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한계마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한계마을 주민은 일반마을 주민에 비해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와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간, 마을 간 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 경쟁과 효율 중심의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계마을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소외지역에 대한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2.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측면이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⁵⁾ 유럽에서는 영국의 Standing(2013)가 인도의 Madhya Pradesh 지역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실험 후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전 세계 농촌지역에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O'Donoghue & Howley(2012)와 Revenu De Base Agricole(2017)은 유럽은 농업직불제가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킨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본소득 방식의 직불제 지급을 주장했다.

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국가균형 발전 문제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조세 감면 정책 등을 제시했다면 본 연구는 전혀 새로운 방식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정책 측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본소득 정책은 주로 청년, 아동, 농민과 같이 특정 연령층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이지만 본 연구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박경철(2014, 2015, 2016, 2019), 정기석(2014), 김성훈(2015) 등은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농민기본소득만으로는 도농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을 단위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농촌 지역(읍, 면 지역) 거주자는 185명, 도시 거주자는 142명이다. 농촌지역 거주자가 많은 이유는 읍지역 주민들은 농촌주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농촌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순수

〈표 2〉 설문조사 개요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충남도 거주 농촌 ⁶⁾ 및 도시지역 주민 327명
조사 기간	2019년 7월 25일~8월 24일(1개월)
주요 조사 내용	1)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에 관한 의견 2)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의견, 3)개인적 사항
조사 방법	전문 리서치업체 조사 의뢰를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

농촌지역(면지역) 주민의 샘플 수를 다소 늘렸다.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15일-8월 14일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3.2. 인터뷰조사

도농 격차의 실태와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농촌, 기본소득,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조사는 사전에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인터뷰조사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먼저 송부해서 작성을 부탁한 후 직접 방문해 이에 관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서면 작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조사는 2019년 7월-9월 사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의 농업·농촌, 지역개발, 기본소득관련 전문가 등 전체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터뷰조사 개요는 아래 <표 3>과 같다.

4. 조사 결과

4.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자가 167명, 여자가 160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66명, 50.8%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96명, 29.3%, 중졸 이하 65명, 19.9%를 차지했다. 직업형태를 보면, 일반 회사원이 97명, 29.7%로 가장 많았으

〈표 3〉 전문가 및 활동가 인터뷰 조사 개요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충남도 내외 전문가 및 활동가 11명
조사 기간	2019년 7월 15일 ~ 9월 15일(2개월)
주요 조사 내용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도농 격차에 관한 의견, 2) 농민수당과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의견
조사 방법	서면조사 및 일대일 면접조사 병행

6) 여기서 농촌은 어촌을 포함한 개념이다.

7) 11명의 전문가 및 활동가는 다음과 같다: 1)신○경(여, 서울, 농업관련 재단 국장), 2)이○미(여, 서울, ○○연구소 연구원), 3)이○중(남, 서울, 농특위 위원), 4)김○태(남, 충남, ○○대학교 지역개발 전공 교수), 5)김○호(남, 충남, ○○대학교 농업경제 전공 교수), 6)김○민(남, 서울, ○○연구소 소장), 7)김○휘(남, 서울, ○○연구소 부소장), 8)박○병(남, 충남, ○○대학교 지역개발 전공 교수), 9)윤○선(충북, ○○대학교 경제학 전공 교수), 10)이○민(서울, ○○연구소 연구원), 11)송○일(서울, ○○당 농업관련 포럼 위원)

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이 81명, 24.8%, 자영업/개인사업이 78명, 23.9%, 주부가 39명, 11.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이 185명, 56.6%를 차지했고, 도시 지역인 동지역이 142명, 43.4%를 차지했다. 그 외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4.2.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에 관한 의견

4.2.1. 지역 간 발전 격차에 관한 유형 비교

지역 간 불균형발전은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은 대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발전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방면의 권력과 재화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외에도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 발전 격차 유형 가운데 충남도민은 어느 유형이 가장 심각한지’에 대해 물었다. 조사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농촌지역 응답자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거의 절반인 4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 격차’가 21.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11.4%, ‘광역경제권 간 격차’는 10.3%로 나타났고, ‘16개 시·군 간 격차’는 8.1%로 가장 적었다. 결과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시지역 응답자들은 지역 격차 유형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42.3%로 가장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 격차’가 27.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격차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지역 주민 간의 인식 격차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지역 응답자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31.8%로 가장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24.8%,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 격차’가 23.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광역경제권 간 격차’와 ‘16개 시·도 간 격차’는 각각 10.7%, 8.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민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위와 같이 지역 간 발전 격차 유형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농 간 발전 격차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점, 인구 집중 억제를 포함한 많은 균형발전 시책이 그동안 있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도시와 농어촌 불균형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혼향도 현상이

<표 4>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

구분	항목	빈도	%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167	51.1	직업 형태	농림어업	81	24.8
	여자	160	48.9		회사원	97	29.7
	전체	327	100.0		자영업/개인사업	78	23.9
연령	40세 미만	85	26.0	학생	21	6.4	
	40대	79	24.2	주부	39	11.9	
	50대	81	24.8	무직 기타	11	3.4	
	60대 이상	82	25.1	전체	327	100.0	
	전체	327	100.0	거주 지역	농촌지역(읍·면지역)	185	56.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5	19.9	도시지역(동지역)	142	43.4	
	고졸	166	50.8	전체	327	100.0	
	대졸 이상	96	29.3				
	전체	327	100.0				

<표 5> 지역 간 발전 격차에 관한 유형 비교

(단위: 명, %)

구분	항목					전체
	①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②광역경제권(예:호남권, 영남권)간 격차	③16개 시·도 간 격차	④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 격차	⑤도시와 농촌 간 격차	
농촌	빈도	21	19	15	39	91
	%	11.4%	10.3%	8.1%	21.1%	49.2%
도시	빈도	60	16	14	39	13
	%	42.3%	11.3%	9.9%	27.5%	9.2%
전체	빈도	81	35	29	78	104
	%	24.8%	10.7%	8.9%	23.9%	31.8%

두드러지면서 국가적 자원 배분이나 민간 투자는 한계에 다다르고 지역 경제는 위축되며,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 등 농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불균형은 가속화되었다. 다시 말해, 보편적으로 농촌은 살만하지 않는 곳으로 인식되었다.”(서울 ○○재단 신○○ 국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도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FTA 등 수출 주도경제에 매진해 농어촌의 파괴를 가속화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농어촌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는 의견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한 여러 처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4.2.2.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

충남도민은 ‘평소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도농 발전 격차에 대해 농촌지역에서는 ‘심한 편이다’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 심한 편이다’가 28.1%로 나타났다. 두 항목을 더하면 농촌지역 응답자의 95.7%는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가 심각하다고 평가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소 완화된 결과가 나왔다. 도시지역 주민의 43.0%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심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매우 심한 편이다’까지 더하면 응답자의 45.7%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전체 지역 응답자에 대한 조사 결과, ‘심한 편이다’가 5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1.1%, ‘매우 심한 편이다’가 18.0%, ‘심하지 않다’가 11.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4.0%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별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에 관한 인식 정도’를 보면(<표 7> 참조), 농림어업 종사자는 100.0% ‘심하다’(매우 심한 편이다+심한 편이다)고 응답했고, 회사원은 58.7%, 자영업/개인사업자는 65.4%, 학생은 66.6%, 주부는 84.6%, 무직/기타는 54.6%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 응답자들 대부분은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는데 구체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 100.0% 심하다는 결과가 나와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시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회사원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가 심하다는 응답이 58.7%로 농어촌지역 주민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정도

이번에는 충남도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양 지역 간 소득 격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우선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에 대해 ‘심한 편이다’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심한 편이다’도 34.1%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하면 95.2%로 농촌지역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에 대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보통이다’는 5.9%에 불과했고,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0.0%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 ‘심한 편이다’가 4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5.1%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표 6> 지역별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항목				전체
		①매우 심한 편이다	②심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심하지 않다	
농촌	빈도	52	125	8	0	185
	%	28.1%	67.6%	4.3%	0.0%	100.0%
도시	빈도	7	58	61	16	142
	%	4.9%	40.8%	43.0%	11.3%	100.0%
전체	빈도	59	183	69	16	327
	%	18.0%	56.0%	21.1%	4.9%	100.0%

〈표 7〉 직업별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항목				전체
		① 매우 심한 편이다	② 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하지 않다	
농림어업	빈도	36	45	0	0	81
	%	44.4%	55.6%	0.0%	0.0%	100.0%
회사원	빈도	7	50	31	9	97
	%	7.2%	51.5%	32.0%	9.3%	100.0%
자영업/개인사업	빈도	6	45	23	4	78
	%	7.7%	57.7%	29.5%	5.1%	100.0%
학생	빈도	2	12	6	1	21
	%	9.5%	57.1%	28.6%	4.8%	100.0%
주부	빈도	7	26	5	1	39
	%	17.9%	66.7%	12.8%	2.6%	100.0%
무직/기타	빈도	1	5	4	1	11
	%	9.1%	45.5%	36.4%	9.1%	100.0%
전체	빈도	59	183	69	16	327
	%	18.0%	56.0%	21.1%	4.9%	100.0%

주: '⑤전혀 심하지 않다' 는 0.0%로 나타나 표에서는 생략함.

〈표 8〉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정도

(단위: 명, %)

구분		항목				전체
		①매우 심한 편이다	②심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심하지 않다	
농촌	빈도	63	113	9	0	185
	%	34.1%	61.1%	4.9%	0.0%	100.0%
도시	빈도	2	65	64	11	142
	%	1.4%	45.8%	45.1%	7.7%	100.0%
전체	빈도	65	178	73	11	327
	%	19.9%	54.4%	22.3%	3.4%	100.0%

주: '⑤전혀 심하지 않다' 는 0.0%로 나타나 표에서는 생략함.

주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절반 가까이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심한 편이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한 반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응답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 응답자에 대한 조사 결과, ‘심한 편이다’는 54.4%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22.3%, ‘매우 심한 편이다’는 19.9%로 나타났고 ‘심하지 않다’는 3.4%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충남도민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에 대해 74.3%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재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4.2.4. 농민수당에 대한 찬반 여부

현재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농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의 농민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해남군은 2019년부터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충남도는 2020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농민수당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가장 높았고, ‘매우 찬성한다’도 24.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을 합하

〈표 9〉 농민수당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명, %)

구분		항목					전체
		①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② 찬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농촌	빈도	0	8	24	108	45	185
	%	0.0%	4.3%	13.0%	58.4%	24.3%	100.0%
도시	빈도	10	73	23	32	4	142
	%	7.0%	51.4%	16.2%	22.5%	2.8%	100.0%
전체	빈도	10	81	47	140	49	327
	%	3.1%	24.8%	14.4%	42.8%	15.0%	100.0%

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82.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3.0%, ‘찬성하지 않는다’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각각 4.3%, 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농(어)민수당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 농민수당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7.0%까지 더하면 도시지역 주민들의 58.4%는 농민수당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찬성한다’는 22.5%, ‘매우 찬성한다’는 2.8%로 두 응답자를 합하면 25.3%에 달하였다. 도시민의 약 1/4만이 농민수당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농민수당에 관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 간 입장 차가 크게 다른 만큼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시인의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수당 찬반과 관련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민수당을 찬성하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의 금액으로는 도농 간 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 목적, 실행 주체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도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농민수당이 액수는 적지만 마을을 지키고 농사를 짓는 농민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정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음은 인터뷰조사 결과 내용이다.

“도농 소득격차가 60%대인 상황에서 농민수당제의 도입은 도시가구와 농업인가구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현재 농민수당의 규모가 미미하기에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내 농어민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적 한계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를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서울 농업관련 위원회 이○○ 위원

인터뷰조사 내용)

“농민수당은 연간 최소 500만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농민수당의 금액은 미미하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포퓰리즘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있다. 또한 농민수당은 공익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공익적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 농민수당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충남 ○○대학교 박○○ 교수 인터뷰조사 내용)

“농민수당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장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연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 수준으로는 소득을 뒷받침해줄 수준의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농민수당 제도의 도입 취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면, 마을을 지키고 농사짓는 농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서울 ○○연구소 이○○ 연구원 인터뷰조사 내용)

4.3.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의견

4.3.1.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

앞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농촌 측면에서 보면,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정책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처럼 주로 도시 건설 위주의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또 다시 이러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농촌지역 지자체에서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 개념에 가까운 농(어)민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비농어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러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도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우선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는 53.0%, ‘매우 찬성한다’는 32.4%로 찬성의 비율이 85.4%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8.6%이고, ‘찬성하지 않는다’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각각 5.9%와 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가 56.3%,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가 7.0%로 합계 63.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21.8%, ‘매우 찬성한다’는 3.5%로 합계 25.3%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농촌지역 주민은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반면, 도시지역 주민은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두 지역 간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조사 결과, 찬성 비율(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은 59.3%로 반대 비율(찬성하지 않는다+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은 30.9%로 전체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찬성이 많았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성장과 원칙을 세우고 지급하지는 의견이 많았다. 즉, 그동안 농촌지역에 많은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유, 단순히 지역 간 균형발전에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생태환경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인터뷰조사 내용이다.

“농촌기본소득에 찬성한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수당보다는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수당으로 도농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농촌을 살리고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다.”(서울 ○○연구소 이○○ 연구원 인터뷰조사 내용)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의 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도농 간 소득 격차와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발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도농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서울 농업○○위원회 이○○ 위원 인터뷰조사 내용)

4.3.2. 농촌기본소득의 필요 이유

농촌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소득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는 응답은 24.9%,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는 17.8%, ‘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기 때문에’는 13.0%, ‘고향을 지키기 때문에’는 6.5%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민들이 농촌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소득이 낮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조사 결과, ‘소득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가 28.6%,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가 17.6%를 차지했다. 나머지 ‘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기 때문에’와 ‘고향을 지키

<표 10>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명, %)

구분		항목					전체
		①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②찬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찬성한다	⑤매우 찬성한다	
농촌	빈도	0	11	16	98	60	185
	%	0.0%	5.9%	8.6%	53.0%	32.4%	100.0%
도시	빈도	10	80	16	31	5	142
	%	7.0%	56.3%	11.3%	21.8%	3.5%	100.0%
전체	빈도	10	91	32	129	65	327
	%	3.1%	27.8%	9.8%	39.4%	19.9%	100.0%

기 때문에'는 각각 11.0%, 5.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4.3.3. 농촌기본소득의 액수 정도

농촌기본소득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논의되고 있기에 곧바로 정책으로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도 있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향후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 액수는 얼마가 적합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우선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으로 '1인당 연간 50~100만 원 미만'이 절반 정도

인 50.3%를 차지했다. 반면,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 '1인당 연간 30~50만 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농촌지역 주민보다 도시지역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4. 농촌기본소득의 대상 지역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향후 농촌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그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조사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선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처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고 이후 전체 농촌지역으로 확

<표 11> 농촌기본소득의 필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항목					전체
	①고향을 지키기 때문에	②소득이 낮기 때문에	③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④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기 때문에	⑤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11 6.5%	64 37.9%	30 17.8%	22 13.0%	42 24.9%	169 100.0%
도시	1 2.4%	14 34.1%	7 17.1%	1 2.4%	18 43.9%	41 100.0%
전체	12 5.7%	78 37.1%	37 17.6%	23 11.0%	60 28.6%	210 100.0%

<표 12> 농촌기본소득의 액수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항목				전체
		①1인당 연간 30만원 미만	②1인당 연간 30~50만원 미만	③1인당 연간 50~100만원 미만	④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	
농촌	빈도	9	58	93	25	185
	%	4.9%	31.4%	50.3%	13.5%	100.0%
도시	빈도	40	61	34	7	142
	%	28.2%	43.0%	23.9%	4.9%	100.0%
전체	빈도	49	119	127	32	327
	%	15.0%	36.4%	38.8%	9.8%	100.0%

<표 13> 농촌기본소득의 대상 지역

(단위: 명, %)

구분	빈도	항목				전체
		①전체 농촌 지역	②인구감소 지역	③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	④처음에는 인구 감소지역에 한정하고 이후 전체 농촌지역으로 확대	
농촌	빈도	42	28	48	67	185
	%	22.7%	15.1%	25.9%	36.2%	100.0%
도시	빈도	18	35	63	26	142
	%	12.7%	24.6%	44.4%	18.3%	100.0%
전체	빈도	60	63	111	93	327
	%	18.3%	19.3%	33.9%	28.4%	100.0%

대'하지는 의견이 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 25.9%, '전체 농촌지역'은 22.7%, '인구감소지역'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처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실시하고 이후 전체 농촌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라는 의견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은 24.6%, '처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고 이후 전체 농촌지역으로 확대'는 18.3%, '전체 농촌지역'은 12.7%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앞서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도농 격차에 대한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 간 관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농 격차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주민들은 거의 대다수(95.7%)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 주민들은 절반 정도(45.7%)만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각종 농촌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도농 격차가 심하다고 느끼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 간 차이가 분명했다. 먼저,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내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농어촌지역 주민은 92.5%가 동의한 반면, 도시지역 주민은 38.0%만 동의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주민은 82.7%가 찬성한 반면, 도시지역 주민은 25.3%만 찬성했다. 마지막으로 도농 불균형 발전에 따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농촌지역 주민은 85.4%가 동의한 반면, 도시지역 주민들은 25.3%만이 동의했다. 농촌에 대한 지원에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 견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도 도시지역 주민들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어

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지원 특히 농민수당이나 농촌기본소득과 같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반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에는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도시지역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과 같은 앞선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인터뷰조사에서도 “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예상되는 반론과 저항을 넘어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의 농촌정책도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왜 추가되어야 하는지, 다른 정책들보다 왜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논리 개발과 설득,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며 행정적으로는 재원조달 방안 마련,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적시하고 식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서울 ○○연구소 김○ ○ 연구원 등)

5. 결론 및 과제

앞선 논의에서 도농 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농촌기본소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촌 현실에서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안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보다 정교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은 부문에서 낙후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반감이나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개발은 향후 농촌기본소득의 실행에 있어서 도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둘째, 농촌기본소득 도입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전국 농어촌지역 가운데 어떤 지역을 우선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인구감소가 심하고 낙후된 지역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충남도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떤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기본소득도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처럼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농촌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 유사제도와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삶의 유지를 위해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이 제도와와의 관계 설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촌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기본소득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체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농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부처이기는 하지만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이 되어있다. 따라서 농촌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촌기본소득제를 총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농촌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 예산 범위 내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예산마련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도농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진정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농촌기본소득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개방과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에 직면한 농어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하고 실시 방안을 제시했지만 논리적, 제도적, 재정적 한계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가이 스탠딩. (2017).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안효상 옮김. 고양: 창비.
2. 강남훈. (2014).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 *제간 민주*, 10, 136-157.
3. _____.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고양: 박종철출판사.
4. 강남훈, 안효상, 권정임, 광노완, & 박이은상. (2014).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고양: 박종철출판사.
5. 광노완. (2014).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녹색평론* 134(1/2), 43-58.
6.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3-57.
7. 김은경. (2007).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경제연구*, 4(2), 133-153.
8. 김성훈. (2015.1.8.). *농가에 기본소득을!*. 프레시안.
9. 김현호. (2007).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관. *월간 자치발전* 8, 16-24.
10. 다니엘 라벤토스. (2016).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한주·이재명 옮김. 서울: 책담.
11.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정부간행물.
12. 모성은. (2009).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월간 자치발전* 5, 17-23.
13. 박경철. (2013).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38, 1-7.
14. _____. (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15. _____. (2016).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충남도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3(1), 73-82.
16. 박경철, 강마야, & 한승석. (2019). *충남 농민기본소득보장제 도입방안 연구*. 충남도의회.
17. 배준구. (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월간 자치발전* 1월호, 17-23.
18. 성경룡. (2005). *균형발전이 미래이다*. 열린충남 가을호, 2-3.
19. 오준호. (2017).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고양: 개마고원.
20. 이명현, & 강대선. (2011). 한국에서의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8(2), 39-64.
21. 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 이승주. (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LAB2050.

22. 이종용. (2008).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평가와 과제. *지리학연구*, 42(1), 91-101.
23. 이호영. (2006).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경제연구*, 4(3), 167-195.
24. 임준홍. (2013). 새정부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제안. *열린충남*, 봄호, 7-11.
25. 정기석. (2014). *공익농민 월급형 기본소득제 실행모델 개발. 제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미간행).
26. _____. (2018).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서울: 삶창
27. 정철모. (200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정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173-186.
28. 윤정미, 유학열, 박정철, 조영재, & 이도경. (2017).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 방안*. 서천군.
29. 차재권. (2017).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사회과학연구*, 25(2), 130-174.
30. 최광운. (2010).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고양: 박종철출판사.
31. 필리프 판 파레이스, &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2018). *21세기 기본소득*. 홍기빈 옮김. 서울: 흐름출판.
32. 하승수. (2015).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대구: 한티재.
33. Casassa, J. H. (2007). Basic income and the republican ideal: Rethinking material independence in contemporary societies. *Basic Income Studies*, 2(2), 1-7. <https://doi.org/10.2202/1932-0183.1081>
34. Casassa, J. H. (2016). Economic sovereignty as the democratization of work: The role of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11(1), 1-15. <https://doi.org/10.1515/bis-2016-0007>
35. Forget, E. (2011). The town with no poverty: The health effect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 *Canadian Public Policy*, 37(3), 283-305. <https://doi.org/10.3138/cpp.37.3.283>
36. Kangas, O., Jauhainen, O., Miska Simanainen, M., & Ylikanno, M. (2019)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Helsinki, Finland: Preliminary result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37. King, J. E., & Marangos, J. (2006). Two for basic income: Thomas Paine(1737-1809) and Thomas Spence (1750-1814). *History of Economic Ideas*, 14(1), 55-71. <https://doi.org/10.1108/03068290810861576>
38. Meade, J. E. (1991). Basic income in the new Europe. *BIRG Bulletin*, 13, 4-6.
39. O'Donoghue, C., & Howley, P. (2012). The single farm payment: A basic income for Farmers? *Basic Income Studies*, 7(1), 1-23. <https://doi.org/10.1515/1932-0183.1196>
40. Osterkamp, R. (2013). The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in Namibia: A critical assessment. *Basic Income Studies*, 8(1), 71-81. <https://doi.org/10.1515/bis-2012-0007>
41. Paine, T. (1797). *Agrarian justice* (Digital ed.). Retrieved from www.grundskyld.dk
42. Revenu De Base Agrucole. (2017). *Considering basic income through the lense of agriculture: An innovative food policy measure to support fairer and more sustainable food systems*. Research Paper 17th BIEN Cingrass 2017. Unconditional basic income Europe.
43. Standing, G. (2013). Unconditional basic income: Two pilots in Madhya Pradesh. A background note prepared for the Delhi Conference, May 30-31, 2013.
44. van Parijs, P. (2020). Basic income: Finland's final verdict. Retrieved May 7, 2020, from <http://www.social-europe.eu/basic-income-positive-results-from-finland>

Received 20 June 2021; Revised 24 June 2021; Accepted 26 June 2021



Dr. Kyong-Cheol Park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Department of Social Integration Research in Chungnam Institute,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society, rural development, and rural China. Address: (32589) Chungnam Institute, 73-26, Yeosuwan-gil,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E-mail: kcpark@cni.re.kr phone: 82-41-840-1206



Mr. Seung-Seok Han is a Researcher at the Department of Urban & Rural, Culture Research in Chungnam Institute,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geography, rural development, and society. Address: (32589) Chungnam Institute, 73-26, Yeosuwan-gil,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E-mail: geographerhan@cni.re.kr phone: 82-41-840-1209